

광주교육감 공약 스마트기기 보급 302억 전액 삭감

시의회 교육문화위, 학교 급식 예산은 54억 증액 신수정 위원장 “준비 부족 추진 바람직하지 않아”

광주시의회가 시교육청이 편성한 학교 급식 운영 지원 예산을 25억원 증액한 반면, 정보화 여건 개선비 302억원 전액 삭감했다.
2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학교 급

식비를 늘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교육청이 편성한 28억원보다 25억원 늘린 54억원으로 조정했다.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비 3억원과 학교정보화여건 개선비 302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학교정보화여건 개선비에는 학생 스마트기기 구입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이 정선 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이지만 시의회는 교육활동 방안과 역기능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학교 시설환경 개선비는 당초 102억원에서 35억원 감액한 67억원,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비 26억원도 20억원 줄

인 6억원으로 조정했다.
반면, 증액된 사업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교육비는 기존 1천600만원에서 3천200만원, 유아 교육 운영비는 7천7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사립유치원 지원비는 2억9천만원에서 5억8천만원, 다문화·복합 이탈 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비 4천만원도 1억원으로 각각 2배 가량 증액했다.
유아 교육 운영비와 사립유치원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사용 장

화에 따른 유아의 언어발달 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원에 보급될 투명마스크 구입 비용이다.
교육위는 시교육청이 편성한 추경 전체 세입 예산 3조2천300억원 중 330억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해 다음 추경 때 세출 예산으로 편성토록 했다.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추가경정예산 취지를 고려해 시급성을 요하거나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폈다”며 “교육감 공약사업이란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나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삭감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시교육청 추경안은 오는 30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3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선강기자



전남 특산품 부스 찾은 윤대통령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청년·귀농·귀촌 희망 박람회'에서 전남 특산품 부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록 전남지사, 청년 농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송정역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기간 만료 앞두고 3년 연장...LH, 도심재생·도시환경 정비

KTX 투자 선도지구로 조성되는 광주 송정역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광주시는 24일 “광산구 송정·월전·장록·송촌동 일원 56만427㎡ (총 1천306필지)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65만9천730.3㎡ (1천570필지)에서 9만9천303.3㎡ (264필지) 줄였다.
시는 2019년 9월7일부터 오는 9월6일까지 3년 간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9월7일부터 2025년 9월6일까지 3년 간 연장했다.
용도 별로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미지정지역 60㎡ 초과와 경우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151평) 초과, 임야 1천㎡ (302평), 기타 250㎡ (75평) 초과 거래에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기는데 토지 취득일로부터 ▲주거용지는 2년 이내 (2년 이상 실거주) ▲상업용지는 4년 이내 (5년 이상 사용) ▲농지는 2년 이내 (2년 이상 사용) ▲임야는 2년 이내 (2년 이상 사용) ▲현상보존용은 5년 이내 (5년 이상 사용)이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3개월)을 부여하고 명령을 불이행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일대는 광주송정역 KTX 지역 경제 거점형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투자 선도지구에서는 기업들이 맞춤형 컨설팅, 50억원 한도 국비 지원, 세제 부담금 감면, 견제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KT)는 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일원 등에 5천943억원을 투자한다. 광주송정역 KTX와 연계해 복합기능 (주거·상업·산업·문화 등) 도입과 주변 도심재생과 연계한 도시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선강기자

전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본격화

자치분권·지방소멸연구회 간담회 잇따라

전남도의회 소속 의원 연구모임들이 간담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자치분권 정책연구회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치분권 정책연구회는 박원종 (대표)·서동욱·전경선·신민호·조옥현·박문욱·주중섭·이재태·류기준·임형석·김주용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간담회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정책연구회는 객관적인 실태 진단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 용역 기관을 선정해 과제를 본격 수행할 계획이다.
박원종 정책연구회 대표 의원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로 자

치분권 정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며 “국회의 의회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도 이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실행 정책을 도

출하기 위한 의원 연구모임이다.
연구회에는 김재철 (대표)·송형근·김성일·김문수·최명수·박성재·최미숙·전서현·신승철·정철·임형석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간담회를 통해 연구단체 활동 방향과 연구조사지역으로 지정된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현장 방문 일정 등을 구체화했다.
연구회 대표인 김재철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지역 스스로 상황에 맞는 인구 증가 방법을 찾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김호진 도의원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전남도의회 김호진 (더불어민주당·나주시) 의원은 지난 23일 개교 125년을 맞은 공립 나주초등학교를 방문, 노후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현숙 도의원, 김정숙

나주시의원, 전남도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학교시설 점검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 등 부족한 지원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고 노후 수전설비 교체, 화장실 보수, 교실 도장, 바닥 보수 등이 건의

됐다.
김호진 의원은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아직까지도 교실 바닥은 노후화로 뒤물리고 틈이 벌어져 있고 아이들이 때로 열록진 화병기를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며 “교육청의 무

관심 속에서 학생 건강·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신속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래 역사를 지닌 학교일수록 교육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도교육청, 나주시와 협력해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기자

김영순 북구의원 “사회안전망 구축 힘써야”

김영순 광주 북구의원은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정의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사회 안전망 부족 때문”이라며 “특히 경제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정이 증가하는 것은 복지 전달 체계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안전망을 확대해 위기가정을 사전에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가정의 경제적 위기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족 상담서비스와 심리 지원 강화 등 프로그램 연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 이상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가정의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연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승희기자



2022 지역혁신 프로젝트

제3회 우리지역기업 바로알기 공모전 시상식 및 홍보문화의 밤

이벤트 참가시 각종 기념품 제공 · 난타공연 · 댄싱팀 공연 · 가수공연

일시 | 2022년 8월 26일(금) 오후 5시 30분 (사전행사는 15시부터)
장소 | 상무시민공원 야외공연장
주최 |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 | 한국광산업협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지역고용정책연구원
후원 |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광주매일신문